

‘국민 강사’ 전한길의 빛과 그늘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이수’와 ‘수료’와 ‘졸업’

졸업 시즌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이수’와 ‘수료’와 ‘졸업’에 대해 헷갈려 하는 것 같아 깔끔하게 정리해 보기로 했다. 어디에 가면 이수했다고 하고, 누구는 수료했다고 하고, 또 어디 가면 졸업했다고 하니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수(履修):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치다(성적을 마무리한 것. 학점 이수).

수료(修了): 다 마치다.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일정한 학업이나 학년의 과정을 다 마치(학점도 다 마치고 졸업시험도 통과).

졸업(卒業): 그 학업의 과정을 마치다(학점도 모두 이수하고 졸업시험 혹은 중합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을 쓰거나 학점으로 대신 취득한 것)

그러므로 초·중등 과정은 이수와 수료·졸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학에서는 학점만 취득하면 이수, 졸업시험까지 통과하면 수료, 졸업논문 쓰고 학위를 받으면 졸업이다. 다만 요즘은 석사논문 대신 6학점 정도 초과 취득해 학점 졸업도 가능하다. 즉 24학점 따고 논문을 쓰거나, 30학점으로 졸업하는 것이다. 박사 과정은 거의 논문을 써야 졸업한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문화회 회장



조우석칼럼

평론가
전 KBS 이사

전한길은 스타 강사에서 국민 강사로 뜬 멋진 남자다.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그가 잔다르크가 아닌 전다르크로 변신해 국민을 일깨워 온 역할은 자유우파로선 크게 감사해 할 일이다. 온몸을 비트는 방식의 독특한 사자후는 설득력도 크다. 본인도 자신만의 매력을 안다. 그래서 종종 자화 개그를 연출한다. 자신의 외모를 필리핀 권투선수인 매니 파쿠아오 등에 비유하는 것이다.

즉 전한길은 학벌 좋고 외모 멋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이웃 같기 때문에 그걸 무기로 의견을 넓힌다. 어찌서 부정선거야말로 윤통이 계몽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지, 지금의 혼란은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래했다는 이수에서 그의 발언은 빛난다. 안타깝게도 그런 전한길은 2%가 부족해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문제로 요즘 논란을 빚고 있어서 내심 걱정이다.

최근 광화문운동의 총사령관 전광훈 목사가 그를 저격했다. “전한길이 역사를 아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 것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기세 좋게 치고 올라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40%대로 주저앉은 배경에도 자주 뺨사리를 내는 전한길의 악영향 탓이란 비판까지 일각에서 일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 두 가지다. 그는 노사모 출신의 노무현 팬이고, 그에 더해 ‘행동하는 욕심’ 김대중을 두고 “5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지도자”라고 종종 치켜세운다. 15일 광주 대접에서도 그러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국민보호인단이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우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야당의) 탄핵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국민보호인단은 매주 목요일 정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미나 선임기자

김대중 동상을 광화문광장에 세우자는 말까지 그곳에서 나왔다 한다. 그리고 전한길은 결정적으로 광주 5·18을 헌법전문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허튼 목소리도 낸다. 이걸 아니다. 잠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 아스팔트 우파에 젊은 피가 수혈되는 건 좋은 일이고, 이 과정에서 약간 생각이 다른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짚을 것은 짚을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노선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 우선 그가 노무현-김대중 지지자란 점인데, 본래 경북 대구가 고향인 그의 그런 정치 성향이란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자유우파 진영의 너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사실 지금까지 자유우파 진영의 아이러너는 누가 뭐래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고, 부국 대통령 박

정희였다. 대한민국이 영속하는 한 이견 변함없으며, 그게 주류가 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일부 젊은 세대가 자유우파로 넘어오면서 친노무현-친김대중 정서를 가진 것도 대수롭지 않다. 바로 그런 게 요지부동 호남을 변화시킬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품어볼 적하다. 단 예전 전한길의 다류 영화 ‘건국전쟁’을 본 뒤 뼈뺀 반응을 보였다는 건 그의 현대사 공부 아직 설익었음을 보여준다. 정말 문제는 광주 5·18에 대한 그의 짧은 인식이다. 이 대목은 눈곱만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건 주사와 운동권에 빼앗겼던 현대사 속의 1980년대 재해석 작업이다. 타놓고 말하자. 피 터지는 주사파와의 전투는 결국 현대사 인식을 둘러싼 3개의 고지점으로 구성됐다. 첫 고지점이 건국 전후사다. 대

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하는 저들의 헛소리에 맞서는 담대한 싸움이다. 2차 고지점은 박정희 시대 1960-70년대 개발 연대 해석을 둘러싼 싸움이다.

두 전쟁에서 자유우파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역사 속의 성취와 팩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1980년대 재해석을 둘러싼 3차 전쟁이다. 여기에서 승리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눈 밝은 많은 이들이 점점 더 공감해 주는 대목이다. 즉 1980년대 재인식 없이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다고 단언해도 된다. 그 시기를 좌파의 놀이터로 변질되도록 놔둔다면 주사와 권력을 막아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왜? 전두환정부는 이승만-박정희에서 시작한 건국과 산업화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산업화의 완성은 바로 그 시기다. 이걸 부정당하는 순간 주사와의 역습에 노출되며 대한민국 현대사를 놓치게 된다. 실제로 지난 40년 우리 운동권 전략에 내내 휘말려 왔다. 외려 그들은 전두환과 80년대를 악마화해 왔다. 즉 좌의 세력은 광주 5·18을 자신들의 정치·도덕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자명하다. 1980년대 재해석 전쟁에서 자유우파가 깨지면 우리 갈 곳이 없다는 걸 전한길을 비롯한 젊은 자유우파들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 바퀴 말해 전한길의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생각이란 알게 모르게 저들의 논리에 자신이 오염됐다는 걸 말해주는 증거가 아닐까.

실은 이 글을 쓸까 말까 망설였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싸움은 3월 중순 현재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자유우파의 움직임은 오직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2% 모자라는 전한길에 대한 충고는 그 때문인데, 서로 다른 건 접어둔 채 지금은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화전은 안 된다. 거듭 밝히지만 우리 여전히 스타 전한길을 사랑한다.

대체조제 활성화 더 미룰 이유 없다



데일리 Talk

허승아
산업경제부 기자

의약품 품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체조제는 더 이상 예외적인 조치가 아닌 일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약국이 더 신속하게 대체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일부 의사 단체가 처방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

까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직능 갈등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편익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품질 약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통보받아야 하는 의원-통보해야 하는 약국-약이 필요한 환자-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도 모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방식은 최소한의 조치로 느껴진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처과 의사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를 조건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사후 통보 방식을 전화-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팩스를 통한 통보는 의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화 통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한 전자화된 통보 시스템은 의사들이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런데도 심평원장은 이 방안이 오히려 의사들의 인지 속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비합리적인 반대에 불과하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 통보 시스템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대체조제 가능 약품이라도 환자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기존 대체조제 시스템에도 해당되는 문제로, 사후 통보 방식을 전자화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심평원장은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이 의사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산하기관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부적절하다.

대체조제는 약사법에 명시된 제도이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의사단체의 반발과 심평원장의 입장이 개정안 추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오히려 대체조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조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품질 약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체조제 관련 협의체를 법제화하고 약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체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heosa@skyedaily.com

SkyeDaily

발행·편집인 조정진 논설실장 박선옥
인쇄인 임채청 편집국장 박용준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20,000원/연 240,000원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